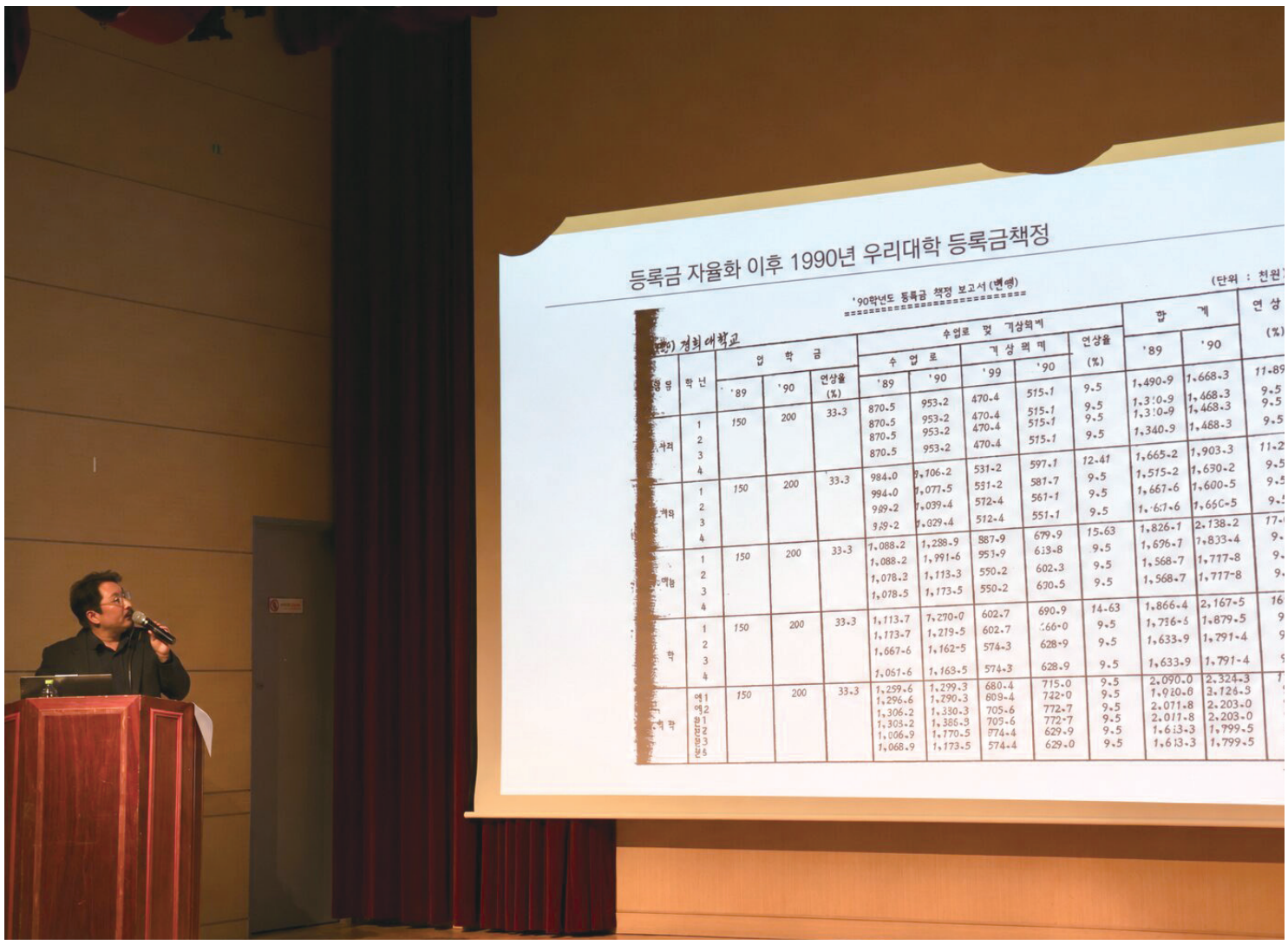
등록금 인상은 계속, 재정 분담 논의는 제자리
학교, 물가 연동 인상 방침… '등록금 대원칙' 합의 지연

이서현 기자 is4203850@khu.ac.kr



지난 3일 열린 재정설명회에 김영진 예산팀장이 등록금 자율화 이후 등록금 인상률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서현 기자)

우리학교가 2년 연속 학부 등록금을 인상한 데 이어 향후에도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학본부는 물가상승에 대응한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난 4월 제기되고 9월 논의가 예고됐던 '등록금 대원칙'은 여전히 구체적인 합의로 이어지지 않았다. 우리신문은 지난 6월 보도와 사설을 통해 등록금 의존 구조와 협상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짚어왔다. 이에 이번 기획에서는 등록금 인상 재원의 활용 현황을 확인하고, 대학과 학생의 합리적인 재정 분담과 지속적인 협의를 위한 논의가 실제로 어디까지 진전됐는지 점검한다.

등록금 인상 기조 지속 물가상승에 따른 필요성 강조

학교는 물가상승률과 연동된 등록금 인상을 대학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정 대응으로 보고 있다. 장기간 동결로 누적된 재정 부담을 고려하면 현행 법정 상한 범위 내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조정처 김영진 예산팀장은 지난 3일 서울캠 오비스홀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재정설명회'에서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누적된 재정 부담과 주요 사립대학 대비 낮은 등록금 수준을 인상의 근거로 제시했다.

우리학교는 2012학년도 등록금을 2.5% 인하한 이후 2024학년도까지 동결을 유지하다 지난해 5.1%, 올해 2.95% 인상했다. 학교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6년 추정치 기준 누적 약 30%에 달한다.

김 팀장은 "현행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올해부터 최근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올해 1.2배로 강화된 점"을 강조했다. 현재의 등록금 인상이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수준이라며 "계속해서 인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록금 인상을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지에 관한 우리신문의 질의에도 물가상승률과 연동되는 현행 상한제가 유지되는 한 인상을 지속하겠다고 답했다. 과거 동결 기간의 누적 물가 상승분을 한꺼번에 반영하기보다 매년 일정 수준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김 팀장은 2027학년도 법정 등록금 인상률 상한이 3~3.2%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법정 상한율에 관한 예측으로, 실제 인상률은 향후 상한률 확정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등록금 인상 재원 약 60억 원 교육환경 · 교원 채용에 투자

학교는 등록금 인상 이후 양캠 교육 환경 개선과 교원 채용 등에 재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인상 재원뿐 아니라 교비와 국고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주요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산팀은 올해 학부 등록금 2.95% 인상으로 약 60억 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 환경 인프라 개선(35억 원) ▲신임교원 채용 및 연구역량 지원(20억 원) ▲학업역량 강화·학생사업 지원(5억 원) 등의 재원 활용 현황을 제시했다. 각 분야에는 추가 재원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캠에서는 청운관 일반강의실 27개와 계단식 강의실 8개 등 총 35개 강의실의 책상과 의자 2,082석이 정비됐다. 학생회관 2~3층의 학생자치 공간과 문과대학 일부 공간도 개선됐다. 국제캠에서는 중앙도서관 지하 1층 자료열람실과 우정원 지하 강의실, 스마트 강의실, 야외농구장 등의 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됐다.

예산팀은 올해 서울캠 주요 시설 공사에 약 113억 원, 국제캠에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는 등록금 인상분뿐 아니라 교비와 국고 등 여러 재원을 포함한 규모다. 더불어 2026학년도 전임교원 79명과 사무직 직원 17명, 기능직 직원 6명 등 총 102명을 신규 채용했다고 밝혔다. 퇴직자를 고려한 신규 채용 관련 투입 재원은 전임교원 약 30억 원, 직원 약 2억 원 등 총 32억 원으로 추산했다. 예산팀은 "개별 공사 금액은 입찰과 계약 등의 사유로 공개하기 어렵다"며 더불어 "실제 지출액은 결산 이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학교는 생성형 AI 플랫폼 ChatKHU 도입과 학생 성장 플랫폼 구축, 학부연구생 제도 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제시했다.

등록금 외 재원 확보 요구 기부금 등 재원 다각화 구상

등록금 외 재원 확보를 두고 학교와 총학생회(총학)은 서로 다른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총학은 높은 등록금 의존율을 완화해 대학과 학생이 재정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학교는 단기적으로 등록금 수입을 확대해 장기적인 재원 다각화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우리신문은 서울 주요 사립대학 8곳의 2025학년도 교비회계(통합) 자금 계산서 결산 자료를 분석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등록금 의존율 산식에 따라 각 대학의 등록금 수입을 자금 수입 총액으로 나눠 산출했다. 분석 결과 우리학교 등록금 의존율은 60.0%로 두 번째로 높았다. 대학별 등록금 의존율은 ▲중앙대 61.6% ▲경희대 60.0% ▲서강대 58.9% ▲한국외대 55.2% ▲한양대 52.9% ▲성균관대 43.8% ▲고려대 42.9% ▲연세대 36.2%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캠 신창훈(행정학 2021) 총학생회장은 기부금 유치 등 대학본부 차원의 수입원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캠 정재우(포스트모던음악학 2020) 총학생회장도 학생이 등록금 인상분을 부담하는 만큼 학교 역시 등록금 외 수입을 확대해 재정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팀장은 "등록금 의존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학 재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5면에 계속 ➞